



5면

세계 최초 드론축구 전용경기장 문 열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음 7월 5일)

제380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지사가 도립공원 지정 해제 권한 독자적 행사’ 전북특별법 첫 적용

도립공원 4곳, 10년 만에 구역 조정

대둔산·마이산 등

11여만평 구역 해제

모악산 금산사·월명암

문화유산 지구 확대

주민 생활 인프라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도립공원 구역과 용도지구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1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편은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도지사가 도립공원 지정 해제·축소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26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2022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공원구역 축소와 용도지구 조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약이 완화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 대상은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내 4개 도립공원이다.

전체 면적 139.375km²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낮고 주민 불편이 큰 0.387km²(약 11만 평)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된다. 특히 공원 경계 200m 이내에 위치한 사유지 가운데 생태 평가 4~5등급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됐다.

또한 자연환경지구(109,265km²) 일부는 공원마을지구(0.250km²)와 공원문화유산지구(0.071km²)로 전환된다.



한순옥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이 26일 도청에서 전북특별법 첫 적용사례인 도립공원 구역·용도지구 손질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원마을지구로 조정되면 주민 생활에 필요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해지고, 문화유산지구로 전환되면 사찰 등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이 용이해진다.

세부적으로는 모악산에서 금산사는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확대되고 월명암 일대는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그동안 노후화로 보수 필요성이 컸지만 공원 규제로 인해 시설 정비가 어려웠던 이 지역은 앞으로 문화재 보존과 관광 자원 활용에 활기를 띌 전망이다.

선운산과 마이산에서는 일부 사유지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인다.

대둔산은 공원구역 해제 없이 일부

지역을 공원마을지구로 조정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편으로 △주민 생활권 내 필수시설 설치 가능 △정주 환경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문화재 체계적 보전 등 다방면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원마을지구 확대는 주거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자연보전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변경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9월 초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고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한순옥 과장은 “도립공원 구역 조정

은 단순히 면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키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지역 발전과 상생을 꾀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관광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자연보전과 지역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공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북특별법 첫 적용 사례로 앞으로 특별법 적용을 받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전북발전에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소기의 성과”

“한미동맹 현대화 진전”

경제 통상 안정화·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서도

양국 정상 비서실장, ‘하타린’ 구축 위해 회동 진행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안정화 △한미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공동 브리핑을 갖고 “세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세부 내용 협의가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투자와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후속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가 동맹의 발전 방향,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고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말했듯 국방비 증액 등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영역 개척에 있어선 대표적으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이후에 늘린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내일(현지시간 26일) 필리핀을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영역 개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양국 동맹의 현대화를 언급하며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했다”며 “(미측의) 반응도 좋았다”고 전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상

비서실장은 이른바 ‘하타린’을 구축하기 위해 회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의 이번 방미 배경을 놓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했던 가운데 수치 외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과 소통하는 게 방미 주 목적이었다고 강 실장은 직접 설명했다.

강 실장과 외일스 실장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백악관에서 40분간 회동했다.

한미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선 첨단산업과 제조업, 전략산업, 문화산업 등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조선과 원자력, 항공, LNG(액화천연가스), 핵심광물 등 5개 분야 총 2건의 계약과 9건의 MOU(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조선 분야의 최대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에너지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컴퓨팅 등 전략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구속력 없는 MOU’로 패키지 조성과 운용을 규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큰 틀에서 양국 간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경영관리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시행방안을 미흡과 계속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을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면서도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은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결혼 비용 낮추고, 의미 더하다... ‘전북 마이웨딩’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시설을 활용한 ‘작고 귀찮은 결혼식’ 지원사업인 ‘전북 마이웨딩’을 추진한다.

전북 마이웨딩 사업은 기존 민간 예식장이 가진 높은 대관료와 식대, 인원 제한 등 과도한 조건에서 벗어나 도내 공공시설을 활용해 예비부부가

원주·전주서 시범운영

경제적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립미술관, 전라감영 등 도내 공공공간을 예식장으로 활용해 원주와 전주에서 우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전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예비부부 중 소규모 결혼식을 희망하는 10쌍이며, 예식공간 무료 대관(음식, 피로연 등 제외)을 기본으로 스텐드(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지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등을 연계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류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도 갖는다. 또한, 과도한 예식 비용을 줄이고 누구나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